

무단 벌목·임도 개설...신음하는 그린벨트

축사 신축 등 자연훼손 심각 “내 땅 내 마음대로 하겠다” 토지소유자들 의식 실종 광주 불법행위 매년 30건



그린벨트로 지정된 광주시 동구 소태동 소태제 인근 아산이 토지소유자의 불법 임도 개설 등으로 훼손돼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 동구 소태동 소태제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올해 초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닭 사육용 축사를 신축했다.

축사 앞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50여㎡ 면적에 무단으로 채석도 깔았다. 또 그린벨트 내 자신 소유의 산에 임도를 개설하면서 대나무 등을 벌목하는 등 총 2110㎡에 달하는 면적을 훼손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광주시 동구청은 지난달 말 제보를 받고서야 현장 확인에 나섰다.

광주시 동구청 공원녹지와 공무원들은 A씨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A씨에게 지난 5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A씨는 구청측에 “임도는 산에서 나무를 키우기 위해 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을 조금 깎아낸 것에 불과하다”며 “주차장 채석 또한 자투리 땅에 깔았고, 축사는 10여 마리의 닭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모두 자연을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는 벌금 형식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A씨가 제출하기로 한 복구계획서를 검토한 뒤 상황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박진한 동구 공원녹지과장은 “A씨의 경우 훼손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위법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행정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 임도 개설과 벌목, 축사 운영 등 각종 불법행위들이 잇따르고 있다.

그린벨트를 관리 담당하는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의 단골 변명인 인력부족 등을 내세워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제보가 있어야만 겨우 현장확인에 나서는 등 수동적인 행정행위가 반복되다보니 그린벨트 훼손 행위가 대법해지고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현재 전체 면적(501.25km²)의 48.8%에 달하는 244.45km²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다. 그 절반을 웃도는 50.5%(123.45km²)가 관산구에 있다.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 토지 형질변

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해제 면적도 엄격하게 정해진다.

사실상 해제면적이 제한적이다 보니 토지소유자들이 법을 어기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 ‘내 땅, 내 맘대로 하겠다’는 실존론 시민의식이 작용하고 있다.

실제 광주에서는 1973년 지정 당시부터 지난 3월까지 총 1451건의 불법행위 등이 적발돼 1397건이 원상복구됐고, 54건은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다.

올초 북구 장등동에서는 276㎡ 부지에 공사용 흙을 쌓아놓은 토지소유자가 적발됐고 문흥동에서는 창고를 무단 증축한 주민이 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들은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중 적발돼 행정조치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강조한다.

광주전남녹색연합 박경희 사무국장은 “도시개발 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벨트마저 훼손되면 도시의 허파인 녹지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며 “그린벨트 지정 목적대로 철저한 자연 보호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매년 분기별로 정가·수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인력이 한정되다 보니 주로 민원이나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불편한 것은 알겠지만 자연을 보호하자는 큰 취지에 공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지법 부장판사들 “재판 거래 의혹 유감”

사법 행정권 남용 재발 않도록 실효적 대책 마련 촉구

광주지법 부장판사들은 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 27명(전체 34명)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간여 비공개 판사회의를 진행하고 2가지 사항이 담긴 결의안을 의결했다.

판사들은 결의안에서 “사법 행정권자의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법 행정권 남용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고참인 부장판사와는 달리 단독·배석판사들은 결의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일 비공개회의를 한 광주지법

소속 단독·배석판사 37명은 회의의 마친 뒤 검찰 수사 의뢰 등에 대해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지만, 과반에 미치지 못해 결의안을 내지 않았다.

광주지법 판사들의 잇단 회합은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말 대국민 사과에 이어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 대법원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오는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경찰, 여성 대학원생 입건

광주북부경찰은 “미술품업 도중 누드 모델을 태블릿PC로 촬영한 전남대 예술대학원생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일보 6월1일자 6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2~5시에 진행된 전남대 예술대 수업에서 여성 누드모델 B씨의 몸을 허락받지 않고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B씨가 최근 전남대 교내에 붙인 ‘저는 누드모델입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알려졌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대자보 내용을 사실로 보고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해당 태블릿PC를 제출받아 디지털 증거 분석작업을 하고 있으며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용희 기자 kimyh@

회사자금 300여억원 횡령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구속

회사자금 3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들이 구속됐다.

광주지검은 “세화아이엠씨 유모 전 부회장과 유모 전 부사장(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하청업체와의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가공 거래를 통한 자금 빼돌리기, 유령 직원 급여 착복 등 각종 방식으로 300여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빼돌린 300여억원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경찰, 서대석 후보 금품수수 의혹 내사 착수

서후보측, 의혹 제기자 등 고발

광주서부경찰은 7일 “서대석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후보가 광주시 공무원 승진과 시 산하기관 사업참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조모(50·사업)씨는 ‘광주시 공무원 승진 인사 청탁과 광주시 산하기관 사업 참여 대가로 1800만원을 서 후보에게 전달했다’며 광주지방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서부경찰은 같은 날 오후 사건을 이첩 받아 조씨가 제출한 자수서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서에 등장하는 인물 등과 조사 일정을 조율해 사실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대석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7일 오전 성명을 내고 “조씨가 자수서에서 청탁 당사자로 지목한 공무원과 해당 업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해왔다”고 의혹을 반박했다.

서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이같은 의혹을 토대로 서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임우진 무소속 서구청장 후보와 조씨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오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지검 “지방선거 악의적 무고 사범 엄단”

광주지검이 선거막판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악의적인 무고와 가짜뉴스 생산 등이 드러날 경우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광주지검은 7일 “선거가 막판으로 치닫되면서 각종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으며, 이와 별개로 고소·고발 사건 중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악의적인 무고 사범이나 가짜뉴스를 생산한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두권 후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후보진영에서 상대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제3의 인물을 내세워 과거 사건에 대한 폭로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의적인 무고 사건이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과거 특정지역에서 3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뒤 가짜뉴스를 생산토록하고, 고소·고발을 펼쳤다가 사건에 연루된 후보 부부가 모두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면서 “올바른 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라도 일단 흠집부터 내고 보자는 식의 막무가내식, 악의적인 무고 사범 등에 대해서 무관용 수사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10대 머느리 친구인 여중생 성추행한 시아버지 ‘쇠교량’



○-10대 머느리의 친구인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성매매까지 제안한 50대 시아버지가 쇠교량.

○-7일 광주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김용규)에 따르면 지난 3월 자신의 20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머느리(15)를 만나기 위해 집에 찾아온 중학교 3학년 B(15·여)양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다듬고 성매매를 제안한 A(50)씨를 청소년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했다는 것.

○-A씨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10대 머느리는 아이까지 낳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에서 A씨에 대한 고소가 취하되고 추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불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데다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검찰시위위원회도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내 구속기소를 하게 된 것”이라며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인 사건과는 다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원룸 매매 [상가원룸 신축전문]

☐ 월곡시장 2분 (고려인마을)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1층 ★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10개) (투룸 2개)
4층 (주택) ★공원앞 전망최고★

보 9천 월 600만 (용3억)
▶매가 9억5천만

- ① 산정동 (1층코너 상가) (원룸 15개) (합 16개) 월세 580만 ▶매가 8억2천
- ② 월곡동시장 2분 (4층 원룸상가) (원룸12개, 투룸2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매가 8억5천만
- ③ 전대정문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매가 12억8천만(용3억5천만가능)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 (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12층중 6층 상가)
롯데마트 앞
23평 (투룸형)
보5백 월 33만

▶시세 1억3천
매가 7천5백만

- ① 상무지구 중심구역 상가 (12층중 6층) 19평 (보5백 월33만) ▶매가 7천만
- ② 북구 용봉동(상가빌딩) 상대분 (코너) 토 65평 건 164평 (4층 안집있음) 보 1억6천 월 430만 ▶매가 11억2천만
- ③ 경기도 평택시 신왕동 (초역세권 토지) 개발시 순수익 10억 ▶매가 9억
- ④ 평택 독곡동 전원주택 분양(투자적합) 송탄역, 친위역 5분 (고덕신도시 7분!!) 1필지 약 200평 ▶매가 2억4천만(용1억2천)
- ⑤ 원룸 토지매매 (광산구산정동) 코너 총 16개 (상가1개) ▶매가 3억5천만

010-7384-7800

상가 건물매매

북구 용봉동 우미A.P.T
상대 1분(코너)
토 65평 건 164평
(4층상가건물 안집 있음)

보 1억6천 만 월 430만
▶매가 11억2천만

- ① 평택 투자 하실분
- ② 부동산 공동투자하실분

※ 연 20% 수익보장 (설정가능)

010-6670-9800

법률 경매

○ 경매교육 ○
(기초부터 ~ 실전 전문)
★6월 개강 선착순 모집★

(주)대신경매

상가빌딩(추천)	토지 추천
1) 서구 쌍촌동 (3층상가주택) 토 90평 건 107평 ▶감정가 6억 → 최저가 4억2천	1) 서구 매월동 348평 유동단지 입구 교차로 코너 6차로대로 접 ▶시세 18억 → 최저가19억5천
2) 남구 진월동 (5층 상가빌딩) 토 128평 건 406평 ▶감정가 18억 → 최저가 15억9천	2) 북구 문흥동 토 378평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3) 화산 도곡면 (무인텔) 토 3,289평 건 3,278평 객실 32개 (월수익 5,000만 예상) ▶감정가 37억 → 최저가11억	3) 남구 월산동 100평 ▶감정가 1억2천 → 최저가 7천9백
4) 서구 금호동 (7층중 7층상가) 토 54평 건 89평 대단위아파트 위치 ▶감정가 6억 → 최저가 3억3천	4) 나주시 송월동 171평 상집지 ▶감정가 8억4천5백 → 최저가 4억7천
	5) 장성군 장성읍 90,910평 ▶감정가 5억4천 → 최저가 3억
	6)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554평 ▶감정가 1억9천 → 최저가 1억2천

★ 일반 부동산토지매매 ★
원룸 토지매매 (광산구 산정동) 코너 총 16개(상가 1개) ▶매가 3억5천만

근린상가/빌라/숙박시설 | A.P.T, 주택 | 공장/기타

① 서구 금호동 7층 중 7층상가 감정가 6억 → 최저가 3억3천만	② 남구 문흥동 현대마트 (40평) 감정가 2억2천 → 최저가 1억4천만	③ 북구 월산동 상우아파트 (30평) 감정가 1억9천만 → 최저가 9천만	④ 북구 용봉동 (2층중 7층상가) 감정가 6억7천 → 최저가 2억9천만	⑤ 남구 주월동 (머트) 토 108평 건 88평 감정가 14억6천 → 최저가 10억
⑥ 남구 문흥동 (6층 숙박시설) 감정가 3억4천 → 최저가 3억6천	⑦ 남구 신안동 (6층 숙박시설) 감정가 2억2천 → 최저가 1억4천만	⑧ 남구 진월동 현대마트 (40평) 감정가 2억2천 → 최저가 1억4천만	⑨ 북구 용봉동 (2층중 7층상가) 감정가 6억7천 → 최저가 2억9천만	⑩ 남구 주월동 (머트) 토 108평 건 88평 감정가 14억6천 → 최저가 10억
⑪ 북구 문흥동 (3층상가주택) 토 90평 건 107평 ▶감정가 6억 → 최저가 4억2천	⑫ 남구 월산동 100평 ▶감정가 1억2천 → 최저가 7천9백	⑬ 남구 진월동 (5층 상가빌딩) 토 128평 건 406평 ▶감정가 18억 → 최저가 15억9천	⑭ 북구 용봉동 우미A.P.T 상대 1분(코너) 토 65평 건 164평 (4층상가건물 안집 있음)	⑮ 서구 금호동 (7층중 7층상가) 토 54평 건 89평 대단위아파트 위치 ▶감정가 6억 → 최저가 3억3천

010-7384-7800 010-6670-9800